

국회 특활비 최다 수령인이 농협은행?

참여연대, 2011~2013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298명이 특활비 수령... 제2의 월급 처럼 지급돼 어떤 명목으로, 누구에 갔는지 전혀 알 수 없어
 법사위원장에 유독 많아... 600만원+1000만원
 박희태 의장 3억대, 강창희 의장 2억8800만원
 교섭단체차원비·교섭단체활동비 등 중복 낭비
 2014~2018년4월 정보 공개는 국회가 거부해

국회 특수활동비로 지급된 금액이 3년 동안 약 240억원에 달하지만 수령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촉구한 결과 지난 달 29일 국회로부터 지출 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아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특활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취지에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 처럼 활동비를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특활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받았던 이는 298명에 달한다. 이 중 수령인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이는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분석됐다.

이 계좌로 입금된 돈이 인출돼 누구에게 갔는지, 어떤 명목으로 지출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3년간 60억여원

국회의장은 해의 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 천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희태 전 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9000달러(약 3억2300만원)를, 강창희 전 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000달러(2억8800만원)를 받았다.

순방을 갈 때마다 5만~6만 달러를 지급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과도하고, 국회가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중복지급의 문제도 꼬집었다. 교섭단체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종류만 교섭단체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교섭단체활동비 등 이미 3가지다. 활동비를 의원들에게 나눠 먹기식으로 분배하느라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한 항목들을 만드는 예산 낭비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현역 의원들에게 특활비를 자신해서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성진 의정감사센터 부소장은 "국회의원들은 급여, 정당보조금, 업무추진비도 받고 있는데 명목에 맞지 않는 특활비를 받고 있다"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말고는 특활비를 폐기하지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지금 당장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자신해서 선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2014년부터 2018년4월까지의 지출(집행)내역 정보공개도 청구했지만 국회가 공개를 거부한 상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회의 거부로 또 다시 행정절차나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에 나서게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것"이라며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책개발비나 특정업무경비 등에서 쓰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뉴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5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장직을 잘 마무리하고 지방선거 승리에 대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준 전북도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전북 방문 "도민 여러분께 감사"

"국민통합 위해 인재 정치권 영입할 것"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5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장직을 잘 마무리하고 지방선거 승리에 대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준 전북도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거취를 묻는 말에 "어떤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인재 정치권에 영입하고(정치) 품격을 높이는 일을 하겠다"며, "나는 영원한 정치인"으로 남겠다고 전했다.

그는 "사남대문제는 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해결점을 찾았지만 군산 GM공장이나 현대조선소는 사적인 문제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문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회담 등 복합적인 문제 해결 등으로 승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폴 리처드 갤러거 대주교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교황청 외교장관인 폴 리처드 갤러거 대주교를 접견하고 있다.

"세월호 유족이 간첩인가? 테러리스트인가?"

평화당 유성엽 의원, 기무사 불법사찰 비판

유성엽(민주평화당, 정읍고창) 의원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TF에 따르면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TF팀'을 꾸려 유족들을 불법 사찰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 내용은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중립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구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 등이다.

기무사는 국군 내 안보와 보안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이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는 군사보안, 방위산업보안, 방첩수사, 대간/대테러이지만 이진부터 민간인 불법사찰 등으로 인해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다.

이에 유 의원은 "기무사는 대테러·간첩기구인데 이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것은 전 정권이 유가족들을 국가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처해왔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도대체 세월호 유가족이 국가에 무슨 위협을 가했다고 간첩, 테러리스트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일갈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무사는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 일하고 있는 기관이지, 안타깝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사찰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본래의 역할을 저버리고 정권의 청부업자 노릇이나 한다면, 그 존재 가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으며, "관련자 엄벌과 재발 방지 조치를 강하게 주문하였다."

한편, 유 의원은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세월호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김진성 기자

청, 민정수석실 특별감찰 강화... 지선 후 기강 단속

감찰관 증원 추진...지자체장 대통령 친인척 감찰 강화 예상

청와대는 5일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의 특별감찰반(특감반) 조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이후 비위 단속을 강화하고, 승리에 도취해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개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의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특감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

현행법상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특감반 감찰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공공기관 감찰 과정에서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보한 비리 첩보는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할 수 있다. 특감반은 지자체단체장은 물론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찰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감반 반장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맡고 반장 이하는 검찰과 경찰 등에서 온 15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인력을 최소 3~4명에서 6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익산 전국체전 북한 참가를"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4일 "오는 10월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방북단이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및 의원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통일농구방북단이 남한 공군기를 타고 어제 북한에 들어갔다"면서 이같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에게 요청했다.

조 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익산 전국체전에서 북한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당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지역 지선 당선자 상공인 교례회 성료

익산지역 6.13지방선거 당선자들과 상공인들이 함께 하는 시민화합 교례회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익산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지난 4일 오후 3시부터 원광대 승산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최영규 도의원, 조규대 의장 등 당선자 30명중 20여명과 각급 기관단체장과 지역상공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문용 상의 회장은 또 "지역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식·조배숙 국회의원은 국회일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대신 축전을 통해 "축하와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도중 총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교례회는 정치와 경제·대학이 함께 한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상공인과 익산시 및 시의회·대학·지역정치인이 혼연일체가 되고 혁명적 발상으로 교통중심지 익산의 발전을 이끌어 내자"고 강조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익산상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힌 뒤 "중앙 무대 요직에 지역출신 인사들이 포진, 호기를 맞고 있는 만큼 중앙정치권과 지역정치권이 힘을 합쳐 익산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총리공관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헌재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해 집회의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내년 12월31일까지 이를 개정하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3호와 23조1호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19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며, 2020년 1월1일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그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관한 최초의 결정이다.

집시법 11조3호는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다만 '행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를 어길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헌재는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